

문재인의 기만과 배신

항일 외치더니 지소미아 연장

노동존중 팽개치고 노동개악

관련 기사 3면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3면

홍콩 민주파 선거 압승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12면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번지고
있는 반란

6면

12월 12일 영국 총선

급진적 경제·환경
공약을 내건
제러미 코빈

7면

김용균 사망 1주기

문재인의
“산재 사망 절반”
약속 배신

9면

미세먼지

기업들과 정부는
이윤 때문에
소극적

5면

투자들에게
막중한 과제 암시한
철도 파업

11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문제가 보여 준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탄핵소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트럼프가 원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헌터 바이든의 기업 활동을 수사해 부패 혐의를 캐내는 것이었다.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 조 바이든은 민주당 소속 전 부통령이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경쟁 상대다.

바이든의 뒤를 쫓는 목적에만 부합했다면 트럼프에게는 우크라이나든 어디든 상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 정치 질서의 위기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보여 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을 세웠지만 300년 넘게 러시아 국가의 일부였다. 스코틀랜드도 비슷한 기간 동안 잉글랜드와의 연합국에 속했다. 이 때문에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은 러시아 세력권에 큰 구멍을 냈



우크라이나와의 커넥션 9월 25일 유엔 총회 자리에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면 그럴 것처럼 말이다.

1991년 독립 선언 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 미국·유럽연합의 각축장이 됐다. 미국 외교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의 한 기사는 우크라이나를 [냉전 후] 유라시아 대륙에 “안정적인 질서를 세우려는 시도가 거둬 좌절됐던 곳”이라고 설명한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에 벌어졌다. 친서방 성향이 뚜렷한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서자 러시아는 전략 요충지인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각종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남동부 일부를 장악했다.

그 때문에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긴

장이 고조됐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일련의 경제 제재가 뒤따랐다.

그 와중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동에서 미군이 일부 철군한 틈을 타 유력한 중재자로 떠올랐다. 뒤이어 푸틴을 존경하는 재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하자, 냉전적 편집증의 기류가 서방과 러시아 양 진영 모두에 흘렀다.

미국이 러시아에서 “색깔 혁명”을 획책할 것을 두려워한 푸틴은 서방의 선거에 개입해 왔다. 이에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국민투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같은 여러 난파가 모두 러시아 개입 탓이라고 둘러대며, 푸틴을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로 써먹었

다.

에초 우크라이나를 미국 대선 논란에 처음 끌어들인 것은 트럼프 일당이다. 당시 이들은 [트럼프 편인] 러시아가 아니라 [민주당 편인] 우크라이나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의 처지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해서 바이든 부자(父子)의 뒤를 캐고 자신을 돕게 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

민주당이 마침내 트럼프의 덜미를 잡았다면서 폭로한 바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와의 커넥션이라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러시아 정부와 그들의 첩자·대자

본가들이 트럼프의 약점을 쥐고 흔든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그동안 내 인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그 인상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결국 트럼프가 푸틴에 경도된 것은 매수나 협박 때문이 아니라 푸틴을 진짜로 존경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안보 기구들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적이다. 그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선 최전선이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초강경 매파인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트럼프와 그의 심복[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등이 원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에게 바이든 부자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볼턴이 9월에 경질된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볼턴과 함께 일했고 7월까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고문이었던 피오나 힐은 21일 널리 호평을 받은 청문회 증언에서, 2016년 미국 대선에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러시아의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이렇듯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 안보 기구들 내 반(反) 트럼프 분위기가 얼마나 광범한지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은 트럼프가 국제적 극우의 성장을 부추기는 인종차별주의자·성차별주의자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미국 제국주의와 다른 열강과의 패권 경쟁에서 트럼프의 무능함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탄핵 발의자들[미국 민주당을 요란하게 응원하기 전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82호 번역 최병현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강동훈

문재인은 얼마 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 439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퍼센트 늘고, 5분위(상위 20퍼센트)는 980만 240원으로 0.7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쳐서,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37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52배)보다 나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3분기의 1분위 월평균 소득이 137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6400원(4.3퍼센트)이 증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집권 직후인 2017년 3분기(141만 6284원)보다는 오히려 3퍼센트 줄어 들었다. 5분위 배율도 2017년 3분기

(5.18배)에 비해 올해 3분기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

이처럼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성과는 미미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말로만 소득주도성장을 떠들 뿐, 실제로는 최저임금 줬다 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파산, 노동계약 등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대비 86만 7000명이나 대폭 증가했고, 정규직은 35만 3000명(2.6퍼센트)이나 감소했다. 통계청의 조사·통계 방식 변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린 것이다.

비정규직이 대폭 양산된 가운데 시간제가 44만 7000명,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인 단기직이 28만

9000명이 증가했다.

정부가 말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체는 낮은 처우, 여전한 차별, 고용불안을 낳는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인데다, 최저임금을 줬다 뺐는 정책까지 추진해 비정규직들의 임금 인상 효과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을 추진해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통과가 지연되자,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하기도 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의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총파업 등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에 제대로 맞서야만 소득 불평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자화자찬의 이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공격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9월 25일 유엔 총회 자리에서 아베와 트럼프

사진:송치백/이민

이현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계속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도 했다.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불과 사흘 만에 이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셈이다. 지난 여름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항일 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했지만, 결국 정부는 미국·일본 제국주의와의 협력을 선택했다.

이 결정으로 한·미·일 지배자들이 우려하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재연장 발표 직후 미국 국무부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지소미아 재연장 발표 직후 문재인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청와대 정부수석 강기정을 보

내어 “지소미아가 잘 풀렸다. 단식을 풀라”고 달랬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가속시키려는 아베 정부와, 한미일 동맹에 군말 없이 충실하려는 황교안·나경원 같은 한국 우파의 기를 더 살려 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한미동맹이 “위기로 내몰렸다”며 지소미아를 다시는 건들지도 말라고 문재인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와 여권은 “외교의 승리”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포장을 하며 파장을 줄이려고 애쓴다. 여차하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호연장담이 진지하게 들릴 리 없다. 이번 결정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배신감과 실망을 놓고 있다. 이러려고 ‘죽창가’ 부른 것이냐는 냉소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재연장 직후 정부가 일본 정부와 설전을 벌인 일이 실소를 자아내는 이유다. 결과가 명백한데도, 어느 쪽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기로 ‘말’했는지(그것도 비공개로) 따위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 갈등이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약간의 소통이고, 세 국가 간의

안보 이슈는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틀 내에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8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진보·좌파의 주류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데 이어 역사적인 한미일 공조 체제(이른바 ‘1965년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배제된(“패싱”) 일본이 제 위상을 확인하고자 벌이는 일이라고도 봤다.

“일본 패싱”?

그러나 본지는 이런 견해는 “시아가 한반도로 국한된 탓에 그 바깥에서 벌어지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핵심을 놓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가령 김하영, 294호,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제국주의 세계 질서(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경쟁과 협력)라는 관점에서 한반도를 보지 않고 그 반대로 보는 식민지 해방론적인 관점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냉전 이후에도, 부상하는 중국을 저지한다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라 안보 협력이라는 면에서 한미일 동맹은 강화돼 왔다. 최근에도 한·일 양국은 갈등 와중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단지 말뿐 아니라 실천에서

도 그래 왔다.

가령, 인도양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올 가을에도 일본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 선박 검색 훈련을 했다. 한·일 두 정부는 모두 미국이 호소한 대이란 봉쇄 작전에도 호의적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 갈등을 조정하느라 꽤나 신경 써야 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관리하는 데서 갈수록 버거움을 느끼는 미국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갈등과 그 봉합 과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주축 동맹국이 일본임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 줬다. 일각의 오해와 달리, 미국은 일본을 전혀 “패싱”하지 않았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갈등을 조율하는 방향은 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전 남한 정부들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독도 영유권 등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지체시키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일본을 두둔해 왔다.

1945년 이래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동맹 체제의 중심에 일본을 두는 것을 이 지역 패권 유지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올해 6월에 나온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패권 확장을 저지할 핵심 국가로서 말이다.

문제는 한국도 대장 미국과 수석 일본의 부차적 파트너로서 협력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거나 약소국이어서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위상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 중심의 질서를 떠받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국가의 위상은 달라졌고, 이제 제국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됐다. 한·일 갈등은 달라진 세력관계를 반영했지만, 한국 정부가 황급히 문제를 봉합한 것에서 한국 지배자들이 제국주의 서열을 넘어설 의지와 능력이 아직 없음도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대다수 한국인의 바람을 계속 외면해 왔다.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배신은 이번에도 이를 입증했다.

민족주의·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 문제

그런 점에서 지소미아 갈등 등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한 진보·좌파 주류의 대응은 돌아볼 점이 있다. 노동계 3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정의당·민중당 지도부들의 행동이 특히 그렇다. 그들은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가 ‘자주·평화적’ 선택을 하게끔 “견인”할 수 있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정부의 배신 가능성을 경계하기는커녕 열심을 내어 정부의 일본 대응에 협조했다.

정의당은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책협의회’에 참가했다. 자민통계는 드러내놓고 정부·여당의 지지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논리, 즉 ‘안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나라에 어떻게 군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도 사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꺼낸 논리였다(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 심 대표는 한일 갈등에 안보 문제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미국 정

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문재인 정부에 제공한 셈이다.

미국·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국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한 축임을 간과한 채 정부와 협력해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헛된 기대다. 이번처럼 정부의 배신 행보에 대비해 운동을 정치적으로 무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 염원 대중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다.

‘국민적 단결’이나 ‘초당적 대응’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특히 노동자 투쟁에 끼칠 악영향을 봐야 한다. 1997년 IMF 경제 공황 때 경험했듯이, 이런 분위기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는 노동자 희생을 강요할 명분을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양보하고 투쟁을 자제하라는 압력을 키운다.

실제로 노정 간 세력관계가 문재인 정부에 좀 더 유리해지고 노동자 투쟁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관련 기사, 김하영, 304호, ‘올해 노동자 투



삼성 이재용과 문재인 ‘국민적 단결’ 기치 아래 기업 지원 확대·노동자 공격 강화한 문재인

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 가?)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런 어려움은 더 커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지도 않을 지소미아 종료를 앞세워 지난 석 달간 실제로 한 일은 “국민적 단결”의 기치 아래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안전 규제를 풀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온 것이었다. 노동운동 지도자들 대부분과 달리 정부 자신은 계급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했던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위안부’ 문제처럼 타협할 가능성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11월 초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제안한 ‘1+1+a’ 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안은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서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부인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 60억 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일 특사였던 문희상은 지난 11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기(한국)서 만날 사람 다 만났[다]”고 말해, 이 안이 자신의 독자적 구상이 아님을 암시했다. 문희상이 친문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그의 안은 청와대와 소통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이라고 말해 왔다. 문희상 안을 통한 ‘해결’은 한일 자본주의와 지배자들의 이익과 안정을 위한 ‘해결’일 뿐, 피해자들

과 대중의 열망은 무참히 짓밟는 짓이다.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같은 언론들의 주요 기사들이 이 안이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는 논조를 드러내는 건 본말 전도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한국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부차적 파트너로서 협력해 왔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것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서 이 점을 보여 줬다. 문재인은 대중의 공분을 의식해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가 합의한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했다. 하지만 합의 파기는커녕 재협상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강제동원 문제도 위안부 문제처럼 될 수 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을 도모해야 한다.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장호중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버리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렇게 의기투합한 것은 기업주들이 데이터 3법 통과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은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지금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데이터 3법이란 이름은 기업주들이 바라는 바를 잘 보여 준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주들이 사용하기, 서로 다른 기관과 기업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사고 팔기, 이를 통해 기업주들이 시장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하기 등.

기업주들은 자신의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 누구에게 팔면 잘 팔릴지, 어떤 경우에 손해를 볼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저장 매체의

급속한 성장은 기업주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리게 했다. 기업주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니 하며 떠들썩한 이유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런 예측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어떤 정보 공유는 보통 사람들에게 편리를 가져다줄 수 있다. 병원 간 환자 정보 공유가 아예 막혀 있다가, 환자들이 매년 병원에서 진료 내역서를 떼 가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조처들은 당장 안전 조처들을 포함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하면 애당초 이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예측이 정확해진다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통신사가 내 소득과 가족관계, 직장과 생활 패턴을 정확히 알수록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통신비를 알게 될 것이다. 보험사가 가입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보험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최대의 보험료와 최소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개발해 봐야 큰 이익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품들은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할 지라도 개발 단계에서 폐기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의 눈을 밝게 해 줄수록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기 쉽다. 소비자는 기업과 대등한 관계



데이터 3법은 보험사 등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용될 것이다 의료 민영화 데이터 3법에 반대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에 있지 않다. 오죽하면 ‘호갱님’이라는 말이 생겨 났을까. 통신, 보건의료 등 공공재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저소득층은 필수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기도 쉽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주들은 어떻게 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 익명화가 아니라 ‘가명정보’를 사용하려 하는 이유다. 가명정보는 다

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쉽게 개인을 식별해 낼 수 있다. 수많은 해커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도는 것은 굳이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많다. 당장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내 가족과 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속이기가 쉽겠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기업주들이 이런 데이터를 노동자 통제에 사용하기도 좋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부터 각종 쟁의 행위에서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금융 정보 등을 활용하려 들 것이다. 국회 통과를 앞둔 법안들에는 이를 원천 차단할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기업주들의 권력을 강화할 데이터 3법에 반대해야 한다.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예고

‘빚더미 인생’ 이제 그만!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이지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11월 15일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 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됐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턱없이 높다.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OECD 내 4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9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711만 5600원이다(국공립대는 약 387만원).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겨자 먹기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18년 2학기~2019년 1학기에만 46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4.3퍼센트 늘어났다.

그에 더해, 대학생들은 생활비 대출도 받는다. 생활비 대출 이용자 비율과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도 대학생들은 돈이 모자라 일반 대출도 받는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은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적자 인생’이



문재인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갔나

다. 취업 전망마저 어두우니, 언제 빚더미 인생에서 벗어날지 막막하다.

사립대 적립금 8조 원

사립대들은 ‘재정이 없어 보릿고개’라며 앓는 소리를 낸다. 전혀 믿을 수 없다. 학생들 등록금으로 만든 적립금이 수천억 원씩 쌓여 있다.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사립대들의 전체 적립금은 무려 7조 8260억 원에 달한다(2018년 기준).

게다가 사립대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유학생 등록금을 계속 인상해 왔다.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여러 대학들의 회계 비리가 밝혀지기도 했다. 애먼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감사가 허술해 그 실제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교육 내실화” 운운하며 대학생들과 학부모 주머니를 털 생각만 하는 사립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뭐하나?

사립대학 총장들이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나섰음에도 교육부는 태평한 모습이다.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정도의 답변만 내놨을 뿐이다.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2023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마땅한데 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을 위해 한 것은 거의 없다. 올해 초, 정부는 국가장학금이 확대돼 3명 중 1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재정은 오히려 줄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생 수가 1.8퍼센트 줄어, 수치상으로 개선이 있어 보이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가장학금 예산이 3년째 3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담보하고 있다.

감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고 그 때문에 강의수가 줄어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정부는 오불관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이런 식

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서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에서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서만은 죄다 속빈 강정이다. 곧 고(故) 김용균의 1주기가 돌아오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최상위권인데 반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도 안 된다.

사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5퍼센트로만 올려도 대학 무상 등록금이 가능하다.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휴학하고 심지어 목숨마저 끊는 학생들의 사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돈 없는 ‘흙수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대학 교육을 받기 원하는 누구나, 언제든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학 등록금은 실질적으로 대폭 인하돼야 하고,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국가 재정 지원도 대폭 개선되고 확충돼야 한다.

사립대들이 모여 등록금 인상을 결의한 만큼, 학생들도 사립대 당국과 정부에 맞서 그만큼 강력한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진영조 기자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이윤 중시하느라 미세먼지 제거 소극적인 정부

김종환 대기과학 박사

미세먼지에 관한 한중일 공동 보고서가 11월 20일 발표됐다.

보고서 내용 중 각국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게 다수라는 점과 국내 미세먼지의 32퍼센트만이 중국 발이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날일수록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람들의 기억을 반박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1년 중 단 몇 달, 아니 며칠 만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때를 우려한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날들까지 모두 합쳐서 1년치 평균을 냈다.

사람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불안감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한국 연강수량이 1300밀리미터라는 사실이 오늘 내가 집을 나설 때 우산을 챙길지 말지와 무관하듯이 말이다.

그 밖에도 보고서에는 허점이 많다. 실제 미세먼지가 컴퓨터 예측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그 게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겨울이나 봄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에 많았다면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할 텐데 말이다.

보통 과학 연구 문헌은 연구 결과와 현실의 불일치 정도나 불확실한 정도를 수량화해서 밝히기 마련인데 그것도 없다.

“예전에는 더 심했다”?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심각해졌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근거 있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도 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2000년 이후부터 발견된다고 밝힌 것이다. “예전엔 미세먼지가 더 심했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데서 개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적다. 미세먼지는 한 번 배출되면 온갖 기상학·화학 변수들에 따라 형

태와 장소를 바꾸기 때문이다.

애초 배출을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다.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는 수많은 유독가스가 있지만 미세먼지만큼은 없다. 미세먼지가 불량 반도체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세먼지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온실가스는 화학 처리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반면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물리·화학적 처리로 제거할 수 있다.

체제의 우선순위

진정한 문제는 이를 누가 강제하고 그 비용을 들일 것이냐이다.

예컨대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도 인근의 산업 단지 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산업 단지는 미세먼지 또는 그 생성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이 공장들에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

구형 경유차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차량 교체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개인들에게 전가된다.(매연 저감 장비에 드는 자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진다.

더욱이 한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경유차를 권장했던 역사도 있는 만큼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가 대기질 관리 차원에서 전액 부담해 교체해야 한다.

한편, 경유차뿐 아니라 모든 차량이 미세먼지 증가에 기여한다고 봐야 옳다. 서울 도심 초미세먼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계절 불분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초미세먼지가 크게 늘다고 지적한다. 대중교통에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2월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또 다른 핵심 배출원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시행이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도 구

체적인 내용이 없다.

더욱이 정부가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는 탓에 발전소 가동률을 일부 제한 하더라도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기사: 본지 299호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공적 금융기관들을 동원해 동남아시아에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려고 공 들이는 것도 문제다.

석탄 화력 발전이 아니라 태양력,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하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은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다.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 중단에 소극적인 이유는 시장 논리 때문이다. 세계 석탄 가격이 싸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대대적 석탄 개발(공급)이 있다.

카메라 앞에서는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할지 몰라도, 정작 뒤로는 중국의 석탄 개발로 낮아진 단가를 이용해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고 수출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 문제에서도 이 정부는 철면피 위선자다.

앞서 말했듯 기술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온실가스보다 더 제거하기 쉽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기업들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기보다 그들의 세계 시장 경쟁을 떠받들고, 전력 생산의 환경적 영향보다 기업을 위한 값싼 전력 공급을 우선하고, 무상 교통을 제공하는 대신 자동차 판매와 ‘공짜 복지는 나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 유지를 더 중시한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진정한 장애물은 자본주의 체제다. 이 점은 온실가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걱정 없이 숨 쉴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 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차별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장호중

11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산하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양극화해소위는 애초 올해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경사노위의 위상이 낮아져, 차일피일 뒤로 미뤄졌다.

경사노위에서 일부 노동계 위원들이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등을 거부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해임하고 위원회 구성을 바꿔 버렸다. 이렇게 물갈이 된 2기 경사노위는 출범하자마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의 거부권을 차단하도록 아예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여전히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경사노위로 묶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의 명분 중 하나였던 사회안전망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 1호’라며 떠들썩하게 홍보한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결국 기존 제도를 통합해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 핵심 인사를 배출하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해 온 참여연대마저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를 요구했을 정도다. 게다가 기존 예산에서 추가되는 규모는 고작 1500억 원 정도인데 한국당은 이 예산마저 모두 삭감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들은 정부 안과 별 차이 없는 것들로, 사실상 ‘개혁’이라 부를 만한 안이 없다.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연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안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범한 양극화해소위도 ‘양극화 해소’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적할 듯하다. 경사노위는 양극화해소위 출범의 사전 작업으로 2018년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운영한 바 있는데, 연구회는 첫 회의에서 “양극화의 주요 원인 및 핵심고리로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로 보고 ... 집중하기”로 했다.(연구회가 활동을 마치고 발표한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완화 구체 방안들은 후속 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1987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이후 ... 노조로서는 투쟁의 대가를 얻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한 것은 양극화해소위가 무엇을 목표로 삼는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불평등 심화의 핵심이 기업주와 노



거창한 명분, 애먼 곳에 책임 전가 양극화해소위는 양극화 확대 낄을 노동자 양보 방향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동자 사이가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이니, 그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양극화의 원인이 아니다. 근본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생겨나는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노동자 한 명당 설비 규모의 차이 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노동소득분배율(전체 부가가치 중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몫)은 오히려 낮다.

이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기업주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조과’ 착취한 것을 나눠먹기는커녕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당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착취하는 자들에 맞서야 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노조로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리 없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한 만큼을 정부나 기업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유지하고 직무급제를 시행해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고 하는 한편, 최저임금 개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채용 등으로 비정규직의 임금도 억제

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건을 개선하면 중소기업·하청 노동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조건도 동반 상승한다.

현대차나 주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일종의 기준 설정자 구실을 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매년 현대차의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이드라인 삼아 나머지 부품사·하청업체의 임금 수준도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만 큼만 올려 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시너지 효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이 소속 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이데올로기도 강화한다. 이는 한편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일부의 보수적 의식을 강화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기 고용주에 맞서 싸우기 어렵게 한다. 이는 양극화 해소는커녕 양극화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반면,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내면, 그것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자신감을 준다. 한 부문의 임금 인상 투쟁이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먹어 들어가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투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양극화는 심화됐

다.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는 물론이고 소득 수준의 격차도 날이 갈수록 커져 왔다.

세계 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를 보면, 1995~2016년 사이에 한국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3퍼센트에서 12.16퍼센트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상위 10퍼센트의 소득도 늘었지만 최상위 1퍼센트를 제외하고 나면 그 증가 속도는 절반도 안 됐다.

1퍼센트의 재산이 나라 전체 재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늘어났다.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위 10퍼센트의 재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양극화는 기업 내 불평등이 아니라 기업 간 불평등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주·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그렇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여전히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슴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났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그런데 지소미아에서 두 손 두 발 다 든 지금, 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규제 완화는 밀어붙이고 있다.

요란한 빈 수레

문재인은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계상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늘어난 2142명에 달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인정률이 높아진 것은 개선이지만, 사고사도 줄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늘었다.

이 실감 나지 않는 숫자 속에, 1년 전 참혹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던 24살 청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있다.

정부·여당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법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다.

유해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지만 고작 4가지 화학 물질에 제한돼 있다. 김용균을 포함한 제조업이나 건설업, 조선업 등의 사고성 재해와 거의 관련이 없다.

게다가 일시적, 간헐적인 작업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며 뒷문을 열어 줬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고도 하는데, 그 책임 범위도 여전히 협소하다. 처벌 기준이 낮아 실효성에도 물음이



고 김용균의 어머니 11월 11일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농성이 가로막히자 울부짖고 있다

제기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개악도 포함돼 있다.

더구나 정부는 지금 개정 산안법을 더한층 누더기로 만들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개정 산안법의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이 하위법령에 화학물질 관련 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런 꾀죄죄한 법안 개정에 김용균의 이름을 갖다 쓰며 생색 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너털너털해진 결과물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탓했다. 물론 산안법은 국회에서 원안보다 곳곳에서 더 후퇴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원안 자체에 들어 있었다. 예컨대 도급 금지에 이런 저런 예외를 뒤 뒷문을 열어 준 조항은 그 모체인 2013년 한정에 민주당 의원의 일부 개정안 거의 그대로다.

산재 지뢰밭

산업재해의 피해는 일부 산업·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서비스직과 생산직, 내국

인과 이주노동자 가릴 것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 확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산업재해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외주화를 원천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주화 자체가 노동자에게 들어가야 할 비용을 줄이고 기업주들이 이윤을 더 가로채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여전하면 사장들의 계산기 위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은 제일 먼저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구조를 없애긴 커녕 비정규직 양산의 장본인 구실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렸고,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화’라는 억지리를 부리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줄기 희망을 짓밟았다.

건설 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산재 사망의 온상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매년 500~600명씩 죽어 나간다. 이 지옥 같은 현장에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다. 올해 4월 김용균의 포레인 26살 김태규 노동자가 수원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주 물량에 따라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9월 20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9월 26일에는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동자가 10톤 넘는 철판에 깔리거나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또,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해 노동 시간을 1800시간대로 대폭 줄여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주52시간제를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대표되는 과로사는

한 해에 300~450여 명에 이른다.

우체국이 대표적이다. 국내 집배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이 넘고, 매년 노동자 10여 명이 과로사한다. 34살 청년 노동자가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을 포함해 올해만 13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배달, 청소, 병원, 반도체, 마트 등 산재 ‘지뢰밭’이라 할 곳들은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그러나 처벌은 미미하다. 2009년 1월~2019년 6월 사이 산안법 위반 사건 중 실형 선고는 0.6퍼센트(35건)에 불과하고 무죄 처리가 6퍼센트에 이른다. 벌금 상한선은 1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7년 5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올해 5월 7일 벌금 300만 원 짜리 사고였다고 판결이 났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온데간데 없고, 개정 산안법에 노동자들이 요구한 처벌의 하한선 도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망 절반으로”라는 약속은 실질적 조처 없는 입발림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의 진정한 관심은 노동자의 생명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 지키기에 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작업 중지 등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 그런 동력을 대정부 투쟁으로도 모아냄으로써 정신 나간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를 뒤엎아야 한다.

기업처벌법 제정이나 산안법 개선도 이윤 우선 논리에 단호하게 도전하는 투쟁이 뒷받침돼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김승주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올해 1월 11일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병숙과 백남호 등 원·하청 관리자 16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런데 태안경찰서는 원·하청의 본사 책임자 대부분을 제외한 11명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시 한 번 노동자 산재 사망의 핵심 책임자들은 책임에서 비껴가고

중·하급 관리자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온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그간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

“연쇄 살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김용균이 원·하청의 “작업지시[를] 다 지켜서” 죽었음을 밝혀 냈다.

2008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산재 사고로 또 다른 ‘김용균들’ 12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산재를 예방하기는커녕 인력이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 업무를 야간에 홀로 시켜 왔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이 28번이나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비용을 이유로 개선하지 않았다.

즉, 원·하청 사장들은 김용균 씨를 비롯한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태안경찰서의 송치 결과를 규탄하며 원·하청 사장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숙 씨는 “아들의 죽음은 예견된 사회적 타살”이라며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번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해 기업주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적극 화답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특조위의 권고안(발전소 민영화·외주화 철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등) 이행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염불

그간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생명·안전 제도의 개악과 후퇴를 거듭해 왔다.

김용균 씨 사망에 공분이 일었을 때는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에 ‘김용균 법’이라 이름 붙여 생색을 냈다. 그러나

이미 정부 입법 단계에서 산재 사망 사업주 형사 처벌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다.

문재인은 올해 초 김용균 씨 유가족을 만나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고, 산재 사망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철도공사 등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이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았다.

문재인이 나서서 산재 사망 절반을 줄이겠다고 한 약속도 공염불이었다. 오히려 지난해 산재 사망은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여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주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신정환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강철구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보이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6일이 월급날이에요. 한 달 월급을 날려도 그때까지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노동자 400여 명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1300여 명을 모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임금 수준과 전환 방식을 서울대병원 본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요구한다. 호봉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정규직과 차별 없이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경쟁 채용이 아니라 전원 전환 채용을 요구한다.

용역업체에 고용될 당시 적용한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도 보장하라는 것도 중요한 요구다. 미화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60대 초중반이라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직접고용이 돼도 당장 해고되거나 몇 년 안에 해고될 노동자들이 많다.

대형 공공 병원에서 파업이 장기화하자 국무총리 이낙연은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파업과 점거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사에게 해결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한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며 투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노사에게 해결책을 요청하더니 유예이탈 화법이 따로 없다. 게다가 서울대병원은 대표적인 국립대 병원이다.

노동자들은 국립대 관할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지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선지역 사무실과, 민주당 김병



11월 15일 분당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열린 파업 집회

욱 의원 분당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그러자 교육부가 노사 협상 테이블을 주선했지만, 사측의 태도가 강경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교육부는 단지 노사 교섭을 주선했 게 아니라 사측이 직접고용을 하게끔 강제할 책임이 있다.

사측은 자회사가 고용 안정에 더 유리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속이려 한다. 지난주에 직종별로 진행한 ‘정규직 전환 설명회’에서 사측은 자회사로 가면

고령자도 오래 일할 수 있고, 처우 개선과 전원 고용 승계 등 직접고용보다 조건이 낫다고 설명했다가 한다.

노동자 분열시키기

노조로 조직돼 있지 않고, 경쟁 채용 시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신규 입사자가 많은 직종을 주로 겨냥해 자회사 전환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여전히 자회사

전환 방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윤병일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사측이 직접고용으로 갈지, 자회사로 갈지를 직종별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물어 투표로 결정하려 한다”며,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사측이 강요하는 자회사 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2주 뒤에 이 투표를 강행하

고자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11월 1일부로 비정규직 전원이 직접고용된 상황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자회사 전환 여부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파업이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싸우고 있다. 먼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성취한 서울대병원 본원 노조가 연대에 나서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유병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새해 벽두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5일 이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GM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해고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으로 3000여 명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그 뒤로 부평·창원 공장에서도 비정규직이 야금야금 해고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업체 재계약 시즌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

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측은 창원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를 핑계로 현재 운영 중인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상시 1교대 근무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맞춰 인원을 감축하는데,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수백 명 규모의 대량 해고가 강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다.

지금 사측은 정규직 노조가 교대제 전환을 합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1교대제 전환을 강제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교대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차 배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비정규직을 내보내야 정규직이라도 살 수 있다’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아비한 이간질을 하고 있다.

이는 GM이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온 방법이다.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며 착취를 강화했다. 결코 일자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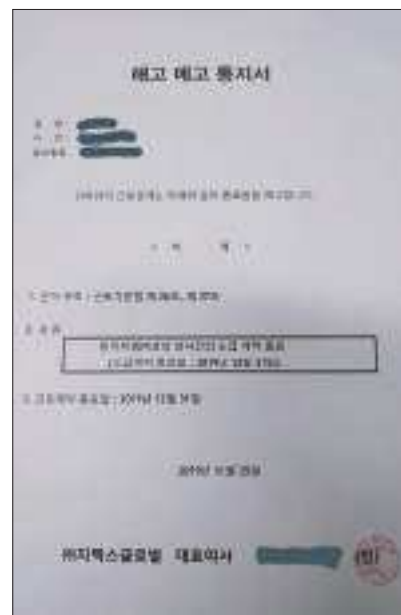
한국GM 군산공장의 경험을 봐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사측은 2015년에 1교대제 전환과 비정규직 1100명 해고를 강행했다. 그것이 공장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고용불안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 3년 만에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한국GM은 문재인 정부로부

터 8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다. 당시 사측은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 내 사업장 운영을 약속했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한국GM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지금 해고 위협에 놓인 노동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불법 파견을 판결받았다. 한국GM 사측은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대놓고 어기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보아넘기며 뒷집만 지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을 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될 이유가 없다. 당장 해고를 중단하라.



한 달 뒤 해고를 예고한 사측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이정원

철도 노조 파업이 제한적이지만 호과를 막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연 종료됐다. 파업 돌입 5일 만이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인력 총원 요구를 '물정 모르는 폐쓰기'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었던 철도공사 측의 안조차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파업의 요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총원 문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 개편(4조2교대로의 전환)과 관련된 쟁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도 벽에 부딪혔다.

SRT-KTX 통합 추진 약속은 여태 첫 발도 못 떤 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민자 사업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SRT-KTX 통합 논의를 위해 발주된 연구 용역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국토부가 비밀리에 이 연구를 종료하려 했다는 점이 최근 폭로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수당 체불 해결과 임금 인상)도 가로막혔다.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파산이 보여 주듯, 철도공사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합의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임금은 자동 인상분(호봉 승급분)을 제하면 고작 0.4퍼센트 올랐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수당 체불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낮은 임금 인상률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별로 얻은 것 없이 파업이 종료되자, 적잖은 노동자들은 불만족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총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니 성과랄 것도 없다.

이처럼 정부가 완강하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파업을 비난하고 나서자 노동자들은 크게 분개했고,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커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비정규직(자회사) 처우 개선 문제도 당장 손에 쥔 것이 없다. 게다가 직접 고용 합의 이행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다.

부족한 연대

철도 노조 파업이 더 전진하지 못한 데는 최근 노동조합 운동 일반이 직면한 난점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초기에 다수 노조 지도자들은 개혁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철도 파업을 비난하며 반(反)노동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11월 23일 철도 파업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혁을 일부 성취할 수 있다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는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가동해 도움이 될 정도로 제한하거나 종속시키는 효과를 냈다. 그래서 번번이 투쟁을 확대할 기회를 유실했다.

지난해 말부터 노동운동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한 경사노위 참가 시도가 올해 초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름에도 비슷한 약점을 반복했다. 특히,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았다. 가을에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나선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그저 여야간 교착상태로 인한 개악 시도 좌절을 기대했다.

노동운동의 이런 약점은 철도 파업 연대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됐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철도 파업을 노

동개악 저지 투쟁으로 연결시키려 하지 않았다. 철도 파업이 노동개악 저지 투쟁으로 이어질 듯했다면 정부는 둘 모두에 약간의 양보를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파업 여론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도 민주노총이나 민중당, 정의당과 같은 대표적인 노동계급 조직들은 연대에 실질적이고 열의 있게 나서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도 그 시점에 정부(기재부 등)와 임금체계, 노동이사제 등의 의제를 다루는 교섭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참여한 교섭은 최근 출범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논의와 병행되는 노정교섭으로, 정부로서는 공공부문 노조들을 대화 테이블에 묶어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정부는 철도 파업에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수 있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럼에도 철도 파업이 성과 없이 끝나는 게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파업으로 대입 수험생들에 불편을 주고 한-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국가적 행사를 망치려 한다'는 비난에도 노동자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유지 방침을 발표해 상당한 대중적 불만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파업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철도노조 집행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날 파업을 종료해 버렸다. 아마도 파업을 지속해 정부와 크게 틀어지면 추후 협상 테이블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러나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내려놓으면 성과를 거두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로 파업 종료 이후 국토부는 인력 총원 협의 약

정부가 완강하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파업을 비난하고 나서자 노동자들은 크게 분개했고,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커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속에 대해서도 '노사가 내놓는 안을 보고 총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은 주머니칼처럼 언제나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체인력과 파업 효과

철도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완강한 대응을 보면서 자칫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했을 수 있다.

실제로,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파업의 효과를 제약하는 대체인력(파업파괴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는 그간 중요한 파업 때마다 빈번히 제기된 문제였고, 노동자들 사이에도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파업 효과에 대한 회의가 적잖이 퍼져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 때 군 인력의 대체인력 투입을 규탄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 군 인력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도 모호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노조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군 인력만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하는 것도 아니다.

대체인력 투입을 실제로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와 사측이 공격을 퍼부을 테지만, 이는 그만큼 파업 효과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투쟁의 초점을 형성해, 연대를 끌어모으는 데도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대체인력을 저지하는 행동은 노동자들의 투지와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물론 이런 막중한 과제가 철도 노동자들만의 노력으로 실행될 수 있는냐는 물음이 던져질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노동운동이 달려들어야 실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노동운동 전체의 차후 토론 과제로 남겨져야 한다.

비록 이번 파업이 아쉽게 끝났지만, 철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투쟁 잠재력이 여전한함을 보여 줬다. 이번 파업의 양상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다음번 투쟁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투쟁을 더 전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홍콩 범민주파 선거 압승 대중 운동은 재개될 것이다

이원웅

11월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양)정부 세력이 참패했다.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고 야당인 범민주파 정당들이 의석을 싹쓸이했다. 그동안 구의회들을 지배해 온 친정부 정당들은 거의 궤멸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한 홍콩 언론은 “대중의 불만이라는 쓰나미”가 선거를 휩쓸었다고 묘사했다.

시위에 염증을 느끼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친정부 인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 오히려 시진핑 중앙정부와 캐리 램 홍콩시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분노가 입증됐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과 친정부 세력은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경찰력 동원과 정규군(인민해방군) 투입 위협으로 항쟁을 탄압하고 있지만 말이다. 홍콩 유력 일간지 <성보(싱파오)>는 캐리 램의 사퇴를 촉구했다.

물론 시진핑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외교부장 왕이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해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치 못할 것”이라며 홍콩 항쟁과 구의원 선거 결과를 마치 서방의 개입 때문인 것처럼 호도했다. 관영 매체들도 계속 항쟁을 비난한다.

행정장관 캐리 램은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민심을 “겸허히 들겠다”면서도

아무런 양보안을 내놓지 않았다. 홍콩 시민들에게 “침착”을 촉구했을 뿐이다.

민주 염원 홍콩 대중은 계속 싸울 의사를 나타냈다. 시진핑과 캐리 램이 얼마 안 가 항쟁 측을 향해 다시 발톱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같은 주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구의회 승리로 야당들이 행정장관 선거인단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게 됐다고 보도한다. 즉,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아니라) 내년 입법회(의회) 선거, 차기 행정장관 선출 등 이후의 공식 정치 일정에 따라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구의회 선거 승리로 야당이 확보한 행정장관 선거인단은 전체의 겨우 10퍼센트 정도다. 선거인단의 다수는 친정부 인사들이며, 현행 선거제 하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원하는 사람이 차기 행정장관이 된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 입법회 선거도 절반이 직능대표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홍콩 대중은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일부 국내 언론이 선거 이후 운동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홍콩에서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 바로 다음 날에도 사무직 노동자들은 “점심 시간 시위”를 벌였다. 이공대에 갇혀 있으며 경찰에 항복하

지 않는 소수 학생들을 지지하는 시위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민간인권전선은 12월 8일 대규모 집회를 열자고 호소했다.

홍콩 항쟁이 더 전진하려면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집단적으로 이용해 지배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파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투쟁을 권력을 위한 투쟁에 이용할 줄 아는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서방의 개입?

한국에서는 홍콩 항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확인되는 가운데, 진보·좌파 정치단체들 안에서는 항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좌파(가령 진보연대와 민중당 등)는 홍콩 항쟁을 사실상 친서방 ‘색깔 혁명’으로 보고 지지를 꺼리고 있다.

자주 거론되는 그 근거는 일부 온건한 범민주파 정당들이 미국의 돈과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들은 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구의원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은 것을 운동에 대한 영향력과 동일시할 수 없다. 그 선거는 친정부 세력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했다.)

‘색깔 혁명’론으로는 항쟁의 규모와 자발성을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서방의 개입이 아니라 홍콩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광범한 분노가



시진핑 출처 @Kreanmeda

학생들을 “내보내라” 선거 다음 날(25일), 이공대에 갇힌 시위 학생들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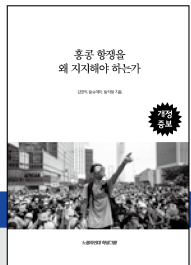
이 항쟁의 진정한 원인이다.

일부 시위대가 영국 국기나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이를 친 서방의 증거로 곧바로 결부시키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많은 항쟁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운동이 서구의 조종을 받는 운동으로 오인되는 것을 우려한다.

무엇보다 서방 주류 정치인들은 항쟁이 더 심화·발전하는 데에 진정한 관심이 없다. 최근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격렬해지자 서구 주류 정치인·언론들은 시위대의 “폭력”을 똑같이 문제 삼았다. 그들은 결코 항쟁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많은 홍콩인들은 서방 제국주의보다는 칠레, 볼리비아 등 세계 곳곳의 (이른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

고 있는) 저항 물결에 더 동질감을 느낄 것이다. 예컨대 항쟁 참가자들은 유럽 지배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카탈루냐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추천 소책자

홍콩 항쟁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김영익·람슈메이·람치렁 지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52쪽, 2,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010-5443-2395